이덕일의 '역사의 창'

중·일의 역사 도발과 남북 대화

중국은 1996년~2000년의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을 필두로 여러 역사공정들을 진행해왔다. 하상주단대공정은 그간 전설상의 왕조로 치부해왔던 하(夏)나라와 상(商:은나라)의 역사를 실제 역사로 만드는 작업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북공정'(東北工程:2002~2007)은 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에서 전개된 고조선·고구려·발해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이었다. 동시에 진행한 서남·서북공정은 티베트와 신강 위그루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이었다. 어찌 보면 무모한 듯이 보이지만 중국은 지금 '중화문명선정공정'(2016~2020)으로 이런 내용을 전 세계에 조직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광개토대왕릉비가 있는 길림성 집안현에 간 적이 있다. 박물관에서 같이 간 일행들에게 고구려사에 대해서 설명하자 공안이 다가오더니 중단시켰다. 야외에 있는 장수왕릉과 광개토대왕릉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인이 고구려사에 대해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 잘 보여 준다.

실제로 중국이 각종 역사공정을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나라는 한국이었다. 고조선·고구려·발해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겠다는데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어찌 가만 있을까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강단 사학자들이 이를 비판하기는커녕 거꾸로 동조하고 나서자 자신감을 가지고 중화문명선전공정에 나서 고조선·고구려·발해사를 중국사라고 선전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대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가짜라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나 삼국사기·삼국유사에 나오는 '가야'가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라고 하는 '임나=가야설'을 비롯해서 '독도는 일본 것'이라는 따위의 역사 도발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조직적으로 역사 도발을 전개하는데 한국은 마치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손을 놓고 있다.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중국과 일본 편을 드는 강단 사학자들에게 막대한 국고를 대 주는 것으로 임무를 거꾸로 수행한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고양이에게 어물전 맡긴다는 속담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완용·이인직·송병준에게 독립운동에 나서 달라며 돈을 대 주는 격이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국고 47억 원을 들여서 '동북아역사지도'를 만들었다. 북한 강역은 물론 경기도까지 중국사의 강역으로 내주었고, 4세기에도 백제·신라·가야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려 놓지 않은 반면 일본에는 강력한 야마토 제국이 열도를 거의 통일했다고 그려 놓았다. 독도는 여러 번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려 오지 않았다. 이런 숱한 문제 때문에 전 정권에서도 폐기된 '동북아역사지도'를 새 정권 들어서 수장이 바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다시 제작하겠다고 나서 많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얼마 전에는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에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국교원대 송모 교수가 EBS에 나와 '단군조선은 없었다'는 따위 조선총독부와 똑같은 말로 개천절을 맞은 국민들에게 역사테러를 가했다.

북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북한의 역사학자들이라면 국고로 만드는 지도에서 자국의 강역을 모두 중국에 넘겨주고 독도는 끝내 그리지 않거나 개천절을 맞아 '단군은 없었다' 따위를 강연하겠다는 발상이 가능할까? 북한 학계는 1962년에 이미 한사군은 모두 요동에 있었고, 임나는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었다고 정리했다. 물론 단군도 실존 인물이라고 정리했다. 반면 남한 강단 사학계는 아직도 한사군은 한반도 북부에 있었고, 가야는 임나며 단군은 신화라고 우기고 있다. 남한이 북한보다 물질은 풍부할지 몰라도 정신은 크게 썩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창에서 독도가 사라진 한반도기가 휘날리자 일본 해군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진해에 입항하겠다고 나섰다. 남한의 정신세계는 과연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랜만의 남북 대화가 남한은 북한에 물질을 지원해 주고, 북한은 정신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로 돕는다면 양쪽 다 사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 說

고양 화재 계기 위험물 취급 시설 관리 철저히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로 위험물 관리 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도 대형 저장 탱크의 부실 관리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물 누출이나 폭발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물론 평소 안전 관리도 소홀해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전국의 위험물 저장 탱크에서는 모두 4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장물 누출 33건, 폭발 9건, 화재 5건, 탱크 전도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전남에서는 여수시 해산동 도로에서 염산을 실은 탱크로리 차량이 넘어지는 등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 7건, 일반 취급소에서 1건 등 8건의 사고가 났다.

저장 탱크를 포함한 전국의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같은 기간 모두 9832건의 위법 사항이 지적됐다. 광주(121건)와 전남(332건), 전북(542건)에서도 995건이나 적발됐다. 하지만 관리 책임자 등이 형사 입건된 경우는 105건뿐이었고 나머지는 과태료나 행정 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지난 7일 큰불이 난 고양 저유소 관리 주체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은 저유소 탱크 주변 잔디에서 불이나 탱크 내부로 불이 옮겨 붙기까지 18분간이나 화재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휘발유 탱크 외부에 화재 감지 센서가 없었던 데다 관리마저 부실했던 탓이다.

인화성 물질이나 독성 물질 등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는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안전 설비 기준이나 관리 규정,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내려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학교 등 임시 주거시설 내진 설계 서둘러야

지진이나 재해가 일어날 경우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이재민 임시 주거 시설' 대부분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만 2년이 지났음에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이재민 임시 주거 시설로 지정된 학교·교회·경로당·관공서 등 10곳 가운데 무려 8곳이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17개 시·도 이재민 임시 주거 시설 내진 설계 적용 현황'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전국 이재민 주거 시설 1만 3560곳 중 72%인 9808곳에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광주·전남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무려 10%나 높은 82%(1899곳 가운데 1562곳)가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에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시설은 학교 561곳, 경로당 501곳, 관공서 67곳, 교회 65곳 등이었다. 반면 대구는 내진 설계 미적용률이 16.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울산·서울·부산시 등도 40% 선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을 거치면서 태풍을 비롯한 각종 재난(예고) 경고 문자 등의 시간이 15초 이내로 짧아지는 등 재난 예방 의식이 높아졌지만 아직 내진 설계만큼은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은 지진 발생 시 대피 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재앙 시설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이미 지정된 이재민 임시 주거 시설을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로 최대한 변경해야 한다. 이어 내진 설계 시설로 변경하지 못한 건물은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해 내진 보강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백세 시대와 운동

김 혜 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과장

작년 영국의 한 대학에서 예측한 평균 수명 모델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여성 평균 수명 90세에 도달한다고 한다.

백세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은 예감인데, 이제는 오래 사는 것 못지않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 과연 건강하게 백세를 맞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무엇일까?

아마도 시대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답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대에는 '운동' 또는 '신체 활동'을 꼽는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운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최근에는 적절한 운동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쇠의 주요 원인인 근육 위축을 치료하고, 책을 읽거나 외우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 기억력 증진과 치매 예방에 더 좋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가 운동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건강 백세를 위한 절대적 필요한 운동에 대해 실제적으로 알아보자.

운동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관절이나 근육을 다치는 것이고, 흔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운동 중 또는 직후 사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운동의 단순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심장이나 혈관 이상이 운동으로 악화돼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작용은 대체로 운동에 숙달되지 않은 초보자에게 발생한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았고 고혈압, 심장 질환, 가슴 통증, 현기증, 뼈나 관절 이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걷기, 조깅, 줄넘기, 자전거, 테니스, 수영, 에어로빅 등)과 무산소 운동(단거리 빨리 뛰기, 근력 트레이닝, 역도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질병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는 유산소 운동이 좋다.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무산소 운동은 갑작스런 몸의 사고에 대비하는 능력을 길러주지만 혈관 저항의 증가 등으로 심장에 부담을 과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적응이 된 사람이 시도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계속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자신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다. 무릎, 허리 등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물속 걷기'나 '수영'이 좋다. 물이 싫은 사람은 자전거나 운동 기구 등을 이용해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부위의 근육 강화 운동으로 관절 주위의 근육 보호 작용을 증가시킨 후 다른 운동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폐경기 여성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의 골다공증을 방지하기 위해 뼈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이 좋다. 땅 위에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걷기, 조깅, 등산, 줄넘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적절한 양의 유산소 운동을 매일 지속하면 제일 좋지만, 꼭 매일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무산소 운동이나 장시간의 유산소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정도의 빈도를 추천한다. 운동 후 2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피로가 지속되거나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뻐근한 곳이 있다면 운동의 빈도나 강도가 심했다고 생각하고 둘 중 하나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일주일에 2회 이하의 운동은 축적 효과가 별로 없다. 할 때마다 같은 피로를 느끼게 되고, 심폐 기능의 향상도 별로 없다. 그러므로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장에 급격한 무리를 주어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빨리 걷기, 맨손 체조, 스트레칭 등이 적당한데 5분에서 10분 정도 한다. 준비 운동은 대체로 잘 하는데, 운동을 마치자마자 샤워장으로 직행하는 등 마무리 운동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마무리 운동 없이 갑자기 운동을 멈추면 사고를 당하기 쉽다.

운동에 재미도 붙이고 효과도 얻으려면 운동의 양을 점차 늘려야 한다. 처음에는 10분으로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5분씩 늘리면 좋다. 운동의 습관화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에게도 마지막 카드는 있다. 평소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다. 자가용 대신 전철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집안의 리모컨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無 等 鼓

조급증

6·13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7기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지난 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 자리에 앉기까지의 과정은 다 제각각이었지만, 취임식에서 그들은 하나같이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에 한 몸 불사르겠다고 천명했었다. 하지만 이들 중 몇몇은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민선 7기 광주·전남 지역 단체장 29명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명,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선거를 치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는 것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채 이 과정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선거를 통해 뛰어난 식견과 능력 및 도덕성까지 겸비한 사람이 반드시 대표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금권 선거, 조직 선거, 여론 조작 및 비방 등으로 주민의 뜻이 있는 그대로 선거에 반영되기 어려운 여건이다. 적당한 사람이 있더라도 금전적인 이유로 선뜻 나설 수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다.

민주주의 발원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과거 제비뽑기로 대표를 뽑았다. 기원전 4~5세기 아테네의 정치 시스템은 민회, 500인 평의회, 민중법원, 행정직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민회는 모두 자원자로 꾸려졌는데, 그 중 제비뽑기로 500인 평의회를 선발했다. 민중법원도 같은 방법으로 6000명을 뽑아 조직했다.

누구라도 다음 제비뽑기를 통해 대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없었다. 임기가 1년에 불과하고 재임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에서 도입되기도 했다.

선거에 당선돼 대표의 지위를 누리게 되면 대부분이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해 조급증을 낸다. 설익은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과시하기도 하며, 대표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던진다. 그것 역시 '선출직'의 숙명일 수 있겠으나,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은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다. 차분하게 진단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앞으로 남은 3년 260여 일간 그 직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좋은 평가는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기 고

산림(山林)은 미래의 자산이다

박 인 종
전 광주시 공원녹지과장

유난히도 금년 여름은 더운 날씨였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토 면적의 70%를 산림이 차지하는 산림 국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산림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는가를 상상해 본다. 우리에게 푸르름과 깨끗하고 맑은 공기, 휴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물을 머금고 있다가 계곡을 따라 맑은 물을 천천히 흘려 보내주는 고마운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옛적에는 휴가를 해수욕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숲이 울창한 산간 계곡과 자연 휴양림을 선호하고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산간 오지 지역은 한동안 교통 불편 등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도로 포장으로 교통 불편이 개선돼 어디나 접근할 수 있게 됐고,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청정 지역으로 각광을 받는 곳이면 어디든 여행객들로 넘쳐나고 있지 않는가. 이 때문에 산간 오지 지역의 지가가 많이 상승하고 아예 시골 생활을 위해 산간 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마저 늘어나고 있다.

장성에 있는 편백나무 숲으로 형성된 자연 휴양림은 60년대에 임종국 선생이 광활한 산림 면적에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잡목을 제거하고 조림 사업을 실시한 지역이다. 당시에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 효용 없는 산림에 투자하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그를 비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무를 계속 심었고 결국 조림왕에 선정됐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산림에 투자한 임종국 선생을 칭송한다.

산림은 공익적 기능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도 임도 개설, 숲 가꾸기, 조림 등 산림을 가꾸는 사업에는 사업비의 90%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산림에서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버섯 재배나 장뇌삼 재배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의 70% 이상에 달하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희망자가 늘고 있다.

우리의 생활 형편이 나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청정 지역에서 자란 자연 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은 산림을 미래의 자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산림은 대부분 편백나무, 삼나무 등 경제 수종으로 울창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목재로 이용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국내 소비에 충당하고 있다.

일본은 산림이 미래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자신들의 산림을 최대한 쓰지 않고 아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산림을 경제 수종으로 바꾸는 조림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림 가꾸기와 소득 창출 사업 등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릿고개에 식량 사정이 어려워 굶주리던 1960~70년대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산에 밤나무를 심도록 했다. 밤으로나마 배고픔을 일부라도 해결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삼천리 금수강산의 산림은 영원히 아껴야 할 미래 자산이다. 우리 모두가 산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